

## [서식 예] 동업자금반환청구의 소

##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 
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 
 전화·휴대폰번호:  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  
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 
 전화·휴대폰번호:  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 동업자금반환 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 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 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와 의족, 의수 등 제작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같은 날 동업자금으로 금 ○○○만원, 같은 달 ○. 금 ○○○만원, 20○○. ○. ○. 금 ○○○만원 합계 금 ○○○만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고, 수익금의 40%를 지급 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

- 중순경까지 위 제작업체를 피고와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있습니다.
2. 그런데 피고는 2000. 0.경부터 원고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위 제작업체의 경영하면서 경영자금 및 수익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원고와 피고는 잦은 다툼이 있었고, 원고는 2000. 00. 00.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고 위 제작업체의 경영에서 물러난 사실이 있습니다.
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출자한 동업자금 000원과 2000. 0.부터 2000. 0.까지의 수익금 중 40%에 해당하는 금 000원 합계 금 000원 및 이에 대한 2000. 00. 0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 르게 되었습니다.

## 입 증 방 법

- |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|
| 1. 갑 제1호증 | 동업계약서  |
| 1. 갑 제2호증 | 지불증    |
| 1. 갑 제3호증 | 수익금지불증 |

## 첨 부 서 류

- |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|
| 1. 위 입증방법 | 각 2통 |
| 1. 소장부분   | 1통   |
| 1. 송달료납부서 | 1통   |

2000. 0. 0.

위 원고 000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		
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</li> <li>· 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</li> </ul>		
불복절차 및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</li> <li>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</li> </ul>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,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,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,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음(대법원 1999. 3. 12. 선고 98다54458 판결).</li> </ul>		

#### ※ (1) 관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